

보도시점 2024. 3. 18.(월) 배포 시

배포

2024. 3. 18.(월)

정부는 사과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3월 18일(일)자 한국일보 「2200원→6000원... 손 떨리는 사과값만든 건 ‘유통’», 매일경제 「정부도 모르는 사과 물량 ‘애플리케이션’ 이유 있었네」 등 기사에서 ❶ “정부가 남아있는 사과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❷ “정부가 사실상 과일시장 개방을 검토”, ❸ “농가가 지난해 정부와 계약해 재배한 물량 4만 9000t은 이미 바닥이 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농식품부는 다양한 경로로 민간 저장 물량, 유통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수급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사과 도매가격(‘24.3월 평균)은 72,311원/10kg으로 전년대비 110.6%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 할인 지원 등 대책 추진으로 소비자가는 29,533원/10개로, 전년 대비 29.3% 수준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관측센터,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등 다양한 경로로 산지 저장물량, 출하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주요 유통주체 보유물량은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산지 사과 저장물량은 2월말 기준 전년보다 30% 수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출하 계획을 점검하여 분산 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농협 산지유통센터(APC)는 저장

물량을 7월까지 지속 공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기사에서 ‘과일시장 개방 검토’ 근거로 인용한 연구는 과일시장 개방 검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며, 과수산업을 진단·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에 따른 과일·과채 부문 영향 분석과 대응과제’(KREI, ‘19),
‘과수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KREI, ‘22) 등

③ 정부 계약재배 물량은 통상적으로 수요가 높은 명절에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과일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명절 소비 비중이 높은 사과 특성상 명절 성수품 공급에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와 같은 생산 감소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김정락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지수아 (044-201-2252)

